

은행, DLF사태 적극소명

우리·하나금융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내일 DLF 제재심의위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오는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DLF 판매사의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된 만큼 은행들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DLF 제재와 관련해 일단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16일에 제재심이 진행될 텐데 그쪽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잘 경청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이 아닌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제재심의 자문을 받긴 하지만 금감원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가운데서 선정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 회장도 참석했지만 윤 원장과 새해 덕담 정도만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경우 이미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을 결정했고, 주주총회 일정 등을 따지면 제재심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징계수위를 낮춰놓는 것이 좋다.

오는 16일 제재심으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양성미 기자 smahn1@

29조 투입, 전기차 리딩브랜드로 '충전·정비' 모빌리티 허브 구축

기아차 'CEO 인베스트 데이'

"2025년 영업이익률 목표 6% 전기차 점유율 6.6%로 높일 것 플랜S로 선제적·미래사업 전환"

기아자동차가 현대차에 이어 최초로 최고경영자가 주재하는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하고 미래 자동차산업 대응을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를 공개했다.

'플랜 S'는 기존 내연기관 위주에서 선제적인 전기차(EV) 사업 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혁신 및 수익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아차는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 자기자본이익률 10.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점유율을 6.6%로 높이고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

기아차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박한우 사장 주재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양대 미래 사업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한우 사장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아차가 미래 고객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랜 S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미래 사업 전환 계획"이라며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혁신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2021년에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고 2025년에 전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11종을 갖추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중국 외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50만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100만대를 판매한다.

기아차의 전용 전기차 모델은 전기

기아차 '플랜 S' 2대 미래 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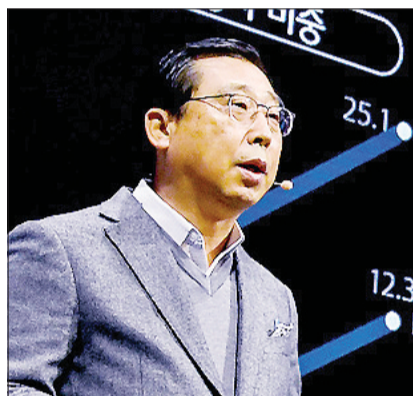
전기차 선제적 전환

- 전기차 대중화 선도
 - 2021년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
 - 2025년 전기차 11종 풀라인업 구축, 글로벌 점유율 6.6%
 - 2026년 전기차 50만대, 친환경차 100만대 판매
 - 전용 전기차-파생 전기차 동시 운영, 가격-시장 차별화
 - 선진시장, 전기차 주력시장으로 육성, 2025년 판매 비중 20%
 - 신형시장, 전기차 선별 투입-내연기관 판매 확대
 - 전기차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 도입
 - 전기차 판매 방식 혁신...맞춤형 구동 모델, 배터리 렌탈-리스 등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 및 PBV 사업 확대
 -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도시, '모빌리티 허브'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모빌리티 허브 통해 물류, 차량 정비 등 신규 수익 모델 발굴
 - 장기적으로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 기업 고객 대상 PBV 시장 선도 ...타깃 고객 전용 PBV 및 맞춤형 PBV 등 신규 개발, 공급

자료/기아차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14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하고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와 '2025년 재무 및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고, 승용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 디자인,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 20분 이내 초고속 충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집약된다.

전기차 라인업은 소비자들인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고성능의 '전용 전기차'와 보급형의 '파생 전기차'로 운영한다. 한국,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신흥시장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해 투입한다.

기아차는 혁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를 도입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 요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차종을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구동 모델,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렌탈·리스, 중고 배터리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기아차는 해외 대도시에서 지역 사업자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차량 정비 센터, 편

의시설 등이 갖춰진 '모빌리티 허브(Hu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허브는 환경 규제 도시 진입이 불가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환승하는 거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 수요응답형 로보셔플 등도 운영한다.

기아차는 또 운송, 물류, 유통 등 기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 신규 기업 고객군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이 현재 세계 산업 수요의 약 5%에서 2030년에 25%로 늘어날 것인 전망이 배경이다.

기아차는 니로EV, 쏘울EV 등 기존 차량에 별도 트림을 운영하는 과도기를 거쳐, 차량 공유 서비스 전용차, 상하차용이한 저상물류차, 냉장/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신선식품 배송차 등 타깃 고객 전용 PBV를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초소형 무인 배송차, 로보택시 등 통합 모듈 방식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PBV로 사업을 확대한다.

특정 용도의 PBV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외부 협업에 적극 나서고 내부에도 전담 개발조직과 생산 체계를 갖춘 예정이다.

기아차는 내연기관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3.4%(3분기까지), 2022년 5%에서 2025년 6%로 올릴 계획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세계 상위 수준인 10.6%로 높인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SUV 판매 비중을 현재 50%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득하위 4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소득 하위 40%

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악화하는 노인기구의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세경 기자 seellee@

INNOBIZ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혁신의 새로운 성장

제19차 정기총회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경자년에도 健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정관 제4장 제17조에 의거,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노비즈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① 일 시 : 2020. 2. 19(수) 16:00

② 장 소 : 임피리얼 펠리시호텔 서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40 소재)

③ 행사계획

- (16시~17시) 제19차 정기총회
- (17시~18시) 2020년도 중점지원사업 설명회
- (18시~20시) 만찬 및 네트워크

2020년 1월 15일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화 031-628-9600)

기업 4곳 중 1곳, “올 구조조정 계획”

이유 46.2% '인건비 절감 위해서' 전체인원 대비 14%수준 구조조정

연초부터 항공업계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사람이 기업이 384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7%는 '올해 구조조정 계획

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31.9%는 지난해에도 이미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이유(복수응답)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4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견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책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는 것.

구조조정 1순위 직원 유형 TOP5



올해 구조조정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